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 전인대(3/5~15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CONTENTS

목 차

요 약

I. 안정적 성장, 양호한 성과 : '16년 실적

- 1 | 1. 지표로 보는 '16년 성과
- 4 | 2. 평가와 과제

II. 2017년 정책

- 6 | 1. (거시경제) 중고속 성장, 고용 확대
- 8 | 2. (분야별 정책) 성장, 혁신, 글로벌화망
- 9 | 1) 성장
- 12 | 2) 혁신
- 15 | 3) 글로벌화
- 19 | 4) 생태환경
- 21 | 5) 경제개혁

III. 정책으로 보는 '17년 진출 유망분야

- 27 | 1. 성장정책의 기회
- 28 | 2. 혁신정책의 공간
- 28 | 3. 대외개방 기회 활용
- 29 | 4. 생태·환경정책의 기회

IV. 시사점과 대응방안 / 31

요 약

- ('16년 성과와 '17년 목표) '16년의 양호한 경제성과 위에서 13차 5개년 계획('16년~'20년) 2년차인 '17년에는 △안정적 성장(중고속 성장) 지속, △성장동력 확충, △경제의 글로벌화를 기본 경제정책으로 설정
- ('16년 평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률(6.7%), 서비스 중심 산업재편(서비스업 비중 51.6%)
 - 특히 실업률 억제 초과달성 및 창업 열기 확산 성과*
 - * 목표실업률 4.5%이내, 달성실업률 4.02%, 일평균 신규창업수 4천개
- ('17년 목표) 중고속 성장 유지, 성장동력 확충, 고용 확대, 글로벌화
 - * 성장률 6.5%(초과 달성 가능), 재정지출 2천억 위안 확대, 통화량 억제(12% 내외), 고용 확대(신규고용 1,100만) 및 기업 부담 경감

<2017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지 표	'17년 목표	2016년	
		목표	실적
GDP증가율(%)	6.5 내외(초과달성 가능)	6.5~7.0%	6.7
물가상승률(%)	3% 내외	3.0	2.0
도시등기실업률(%)	4.5%이내	4.5이내	4.02%(초과 달성)
도시신규고용(만명)	1,100	1,000	초과 달성 1,314
수출입	수출입 회복 안정 및 호전, 수지 균형	회복 안정 및 호전, 수지 균형	부진 심화, 하반기 부진 완화
재정적자(%)	3% - 2.38조 위안 (전년비 2천억 위안 증가)	3.0	3.8
통화증가율(%)	12 내외	13.0	11.3

자료 : <정부업무보고>, 2016년, 2017년

□ (중국진출 시사점) 성장정책, 혁신정책, 대외개방 확대, 녹색성장전략 등에 따른 기회 늘어날 전망

○ (성장정책) 소비·투자 확대, 지역개발, 신형도시화에 따른 기회

* 예) 서비스업, 인터넷 관련 업종, 고품질 소비재,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프라 관련, 첨단 설비 및 기계류 수요 확대

○ (혁신정책) 인터넷 plus(+),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창업 확대에 따른 시장기회 확대

* 예)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응용 비즈니스(전자상거래, 첨단 물류시스템, 인터넷 의료, 인터넷 교육 등) 기회,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 관련 첨단 설비·소프트웨어, 창업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직접 창업 기회 확대

○ (대외개방)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되면서 관련 기회가 더욱 커질 전망

* 예) 서비스 개방 확대, 소비재 수입여건 개선, 제3국 공동개발 및 진출기회 확대

○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목표제 실시에 따른 기회

* 예) 에너지 절감 관련 소재, 제품(단열재 등), 신에너지 소재·부품(태양열, 배터리, 풍력 등), 환경 관련 소재 및 부품(수처리, 대기오염 정화) 및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대응방안) 중국시장의 중요성과 진출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므로, 일상적 유대강화·리스크 대비능력 강화 시급

○ 진출 확대 기회 확대가 다양하므로 분야별 진출 방안 모색

- 서비스, 고품질 소비재, 정보통신, 장비·기계, 환경·신에너지등 분야별로 진출환경이 다름을 감안한 전략 강구

○ 한중 교역이 서비스, 소비재, 프로젝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중간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노력

□ (분야별 정책) 5대 분야에서 기존 정책의 구체화·지표화
진전된 가운데 개방확대·글로벌화 경제 추진 강조

* (5대 분야) 성장, 혁신, 대외경제, 생태환경, 경제개혁

- (성장) 서비스업, 고품질 소비재 등 소비촉진과 지역발전 전략, 신형도시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 (혁신) 과학기술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창업 추진
- (대외경제) 대외개방을 넘어 ‘외향형 경제’와 통상네트워킹 구축
- (생태환경) 대기오염, 수질·토양 오염 대응, 생태환경 보호 등 지속 강조
- (경제개혁) 공급측 개혁 명료화·지표화*, 여타 경제개혁 과제 지속 추진
*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三去(과잉설비 해소, 부동산재고 해소, 부채레버리지 감소) ; 一降(비용 절감); 一補(민생 지원))

<2017년 5대 분야별 정책(요약)>

분야	내용	'16년 비교
성 장	소비 촉진, 투자 확대 - 지역균형발전 및 신형도시화 추진	좌동
혁 신	과학기술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전통 산업 개선, 창업 육성	창업, 혁신 등 개혁정책의 일부로 제시
대외경제	개방 확대, “反글로벌화”와 보호주의등 불확실성에 대응 - 일대일로 추진, 수출입 확대, 투자개방 확대, 양자·다자협상 확대	일대일로, 국제 생산력 협력, 수출입 확대, 대외 개방 확대, 양자·다자 협상 진전
생태환경	공기, 수질, 토양, 생태계 보호 강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대처 강화, 에너지환경산업 육성, 생태계 보호
경제개혁	○ 삼거일강일보 추진, 부족지점 지원 ○ 정부역할, 재정, 금융, 국유기업(자산) 개혁, 민간경제 개혁	공급측 개혁, 재정, 화폐, 금융개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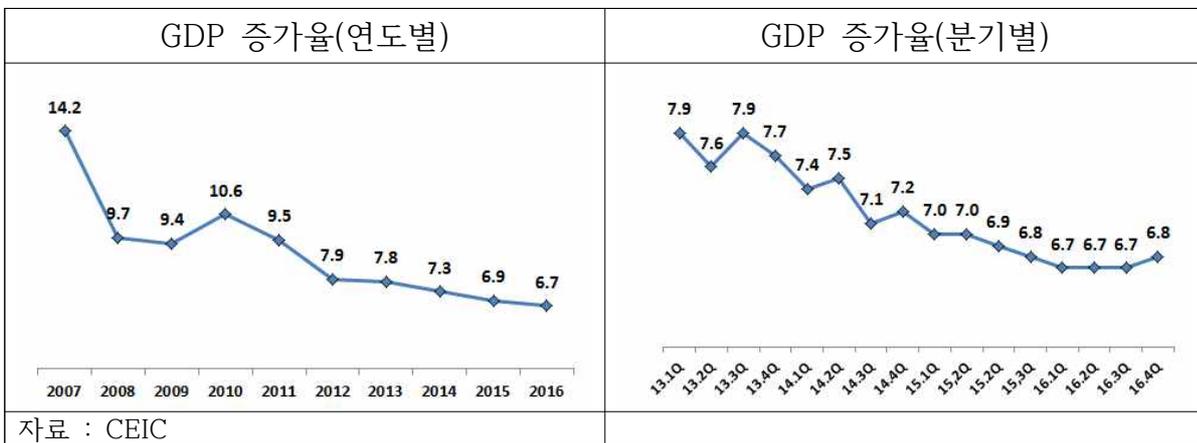
자료 : 본문 내용을 요약

I. '16년, 안정적 성장·양호한 성과

1. 지표로 보는 '16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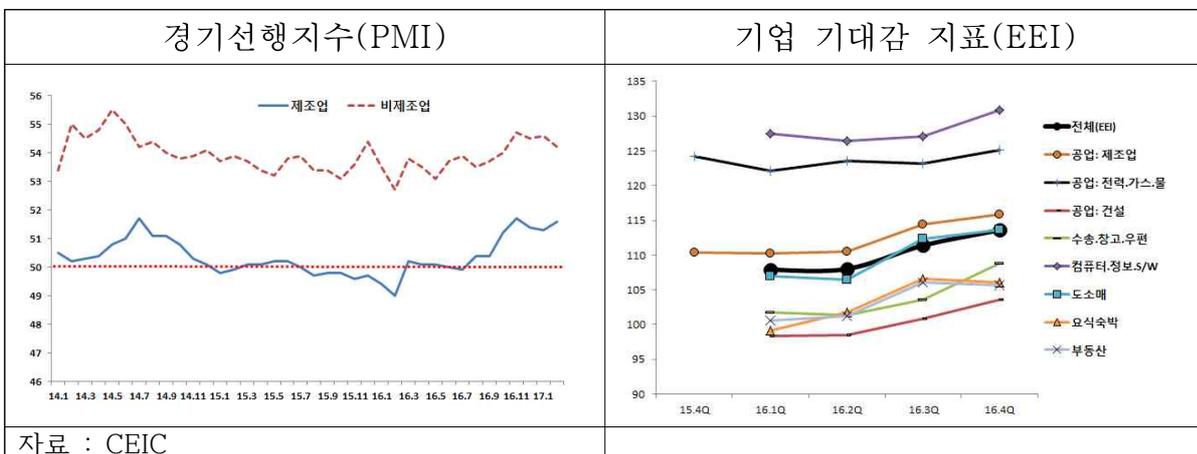
□ (성장률) 중고속 성장 지속

○ 5년째 '유도된 성장 둔화', '16년에는 안정 끝에 성장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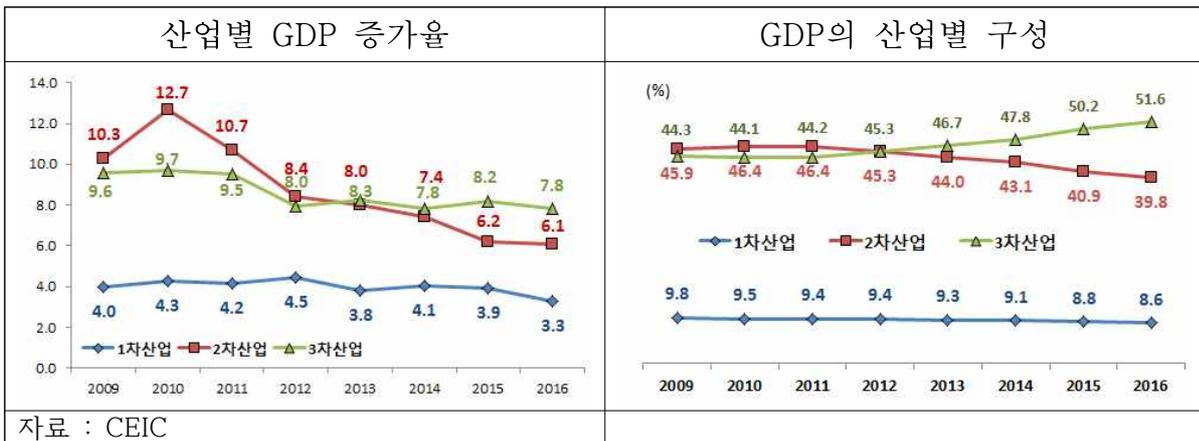
○ 경기 전망, 사업 기대감 모두 상승세

- 경기선행지수(PMI) '16년 7월 이후 경기확장세 지속
- 기업기대감지수(EEI), '16년 내내 상승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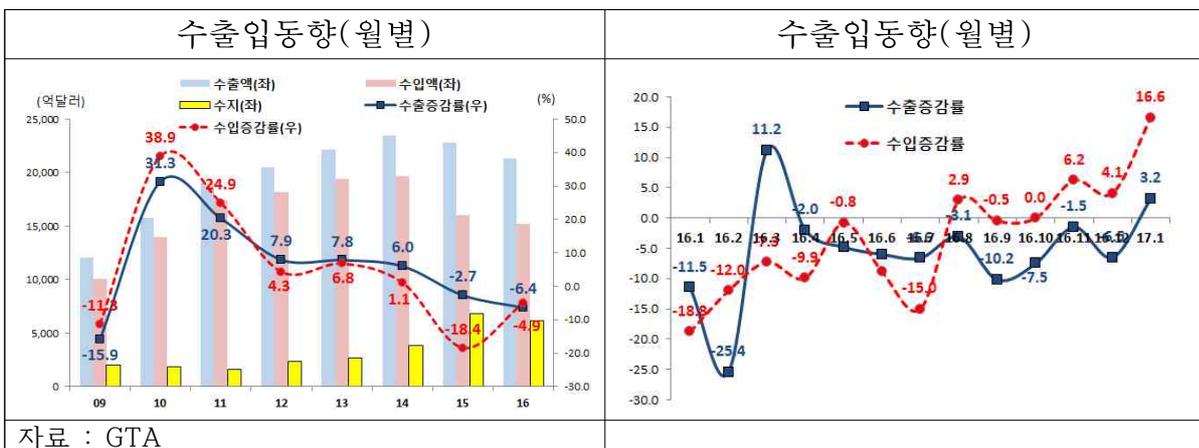
□ (산업구조) 3차 산업 대세 가속화

- 2차 산업 증가율 6.1%인 반면 3차산업은 7.8%나 증가
- 2차 vs. 3차 산업 비중 격차 9.3%(‘15년) → 11.8%(‘16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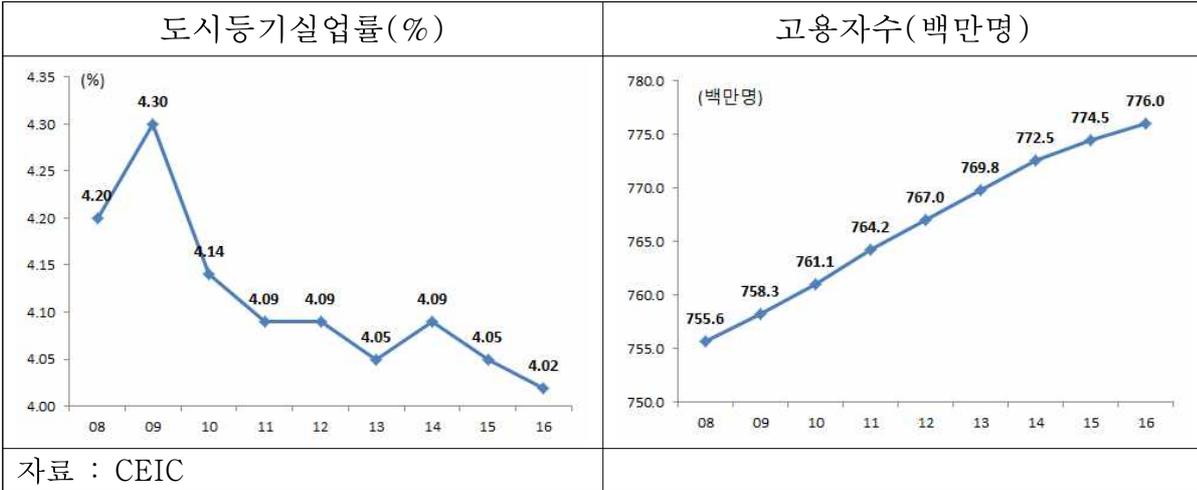
□ (수출) 둔화중이나 충격에서는 벗어나는 중

- 2년 연속 수출 감소, ‘1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 (‘16년 자랑거리1) 낮은 실업률과 고용 확대

- (실업률 초과달성) 목표는 4.5%, 달성은 4.02%
- (신규고용 초과달성) 목표 1,000만명, 달성 1,314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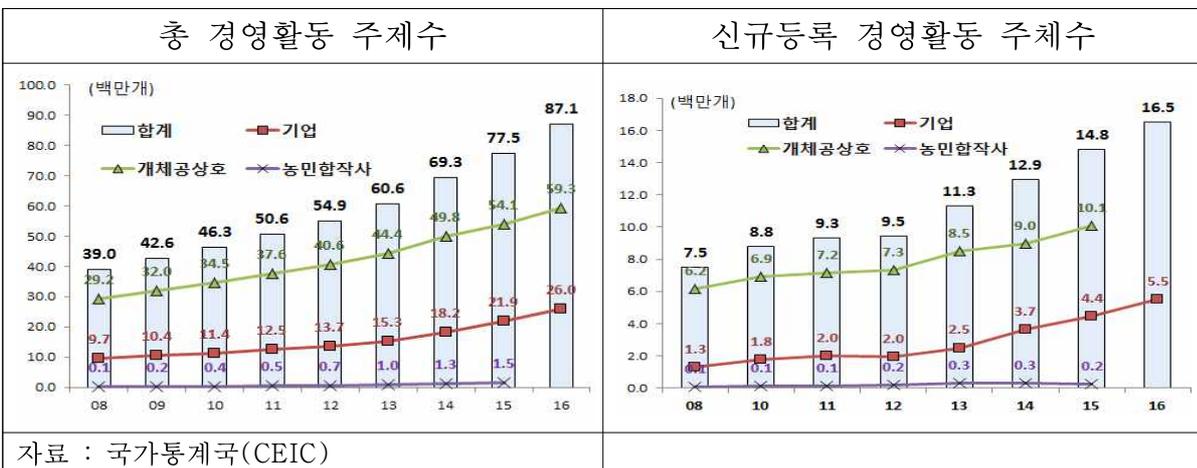


□ ('16년 자랑거리2) 불붙은 창업 열기

- 창업, 해가 갈수록 급증

* 신규 경영활동 주체수(백만 개) : ('14년) 12.9 → ('15년) 14.8 → ('16년) 16.5

☞ “최근 3년간 일평균 4만개 이상의 시장주체가 등록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3/15))



2. 평가와 과제

□ (평가) 두 마리 토끼 잡고 풀밭까지 일군* 한해

* 성장과 안정 이루고, 실업 잡고 창업 확대

○ '16년의 평가를 7가지로 요약(<정부업무보고> 중)

- 안정과 경기호전 달성
- 취업 확대 초과 달성
- 개혁개방 심화 확대
-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 새로운 발전 동력 확충
- 인프라 지속 확대·제고
- 인민 생활 개선

○ (전년도 비교) 2015년 <보고>에서도 4가지 성과 제시하긴 했으나 대체로 소극적이고 조심스런 태도

- 합리적 성장 유지
- 구조조정 긍정적 성과
- 새로운 발전동력 성장
- 인민생활 개선

<전년도 경제성과 평가 비교>

'17년 <보고>에 나타난 2016년 평가	'16년 <보고>에 나타난 2015년 평가
온화한 안정, 안정속 호전 취업 확대 초과달성 개혁개방 심화 확대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신발전동력 지속 증강 인프라 지속 제고 인민생활 개선	합리적 성장 유지 구조조정 긍정적 성과 신발전동력 쾌속 성장 인민생활 개선

* 자료 : <정부공작보고>, 2016년, 2017년

□ (과제 · 리스크) 난관과 리스크 강조를 통해 '17년 정책 과제를 제시

- (경제운용) 경제운용과 관련 6가지 해결과제 지적
 - 경제성장의 내생적 동력 허약
 - 일부 업종 과잉생산 심각
 - 일부 기업 경영 곤란
 - 지역간 발전 격차 지속 · 확대
 - 재정수지 불균형 과대
 - 금융리스크 상존
- (환경) 환경오염, 특히 일부지역 스모그 빈발
- (민생) 주택, 교육, 의료, 양로, 식품 · 의약품 안전, 수입분배 등 분야 주민 불만 만연
- (안전) 석탄, 건축, 교통 등 분야 안전사고 빈발
- (정부사업 문제) 정책 집행 미진, 기업부담 과다, 민원업무 불만 심각, 공무원 부정부패 상존 등

□ 2017년 핵심 경제과제를 5가지 제시

과 제	내 용
안정속 개혁과 성장 (穩中求進)	○ 안정적 성장, 취업 보장, 리스크 예방, 금융안전 수호, 민생 보장, 환경보호 달성 - 이를 통해 개혁 추진, 구조개혁 가속화
공급측개혁 (供給側改革)	○ 비효율적 공급 감소, 효율적 공급 확대 - 행정간소화와 감세, 진입장벽 완화, 혁신 장려 추진
총수요 확대와 효율 제고	○ 내수 촉발 동력 발굴 통한 내수 확대 - 민생 개선 통한 소비 확대, 확산효과 있는 투자 확대
혁신 통한 생산동력 전환과 구조 개선	○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인력과 인재를 자원 삼아 혁신 발전 가속화, 신생산 동력 육성, 전통 동력 개조·제고
대중적 관심문제 해결	○ 대중의 반응이 크고 기대가 절박한 문제 해결에 집중

* 자료 : <'17년 정부업무보고>

II. 2017년 정책

1. (거시경제) 중고속 성장, 고용 확대

□ (성장률) 작년보다 약간 낮은 6.5%를 목표로 제시

* 목표 6.5~7.0%, 실적 6.7%

○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이는 성장 하한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

○ 실제로 <보고>에서 “성장 목표가 6.5% 좌우이지만 실제 사업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감 피력

□ (운용방법)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극적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안정적 경제운용과 성장동력 육성 도모

○ (재정정책) 전년과 같은 3.0% 재정적자폭을 제시했으나 중국 경제 성장(규모 확대) 감안시 실제로는 전년대비 2천억 위안 증가한 2.38조 위안 규모

— 재정적자 확대 목적은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비용 부담 경감*, 민생지원 확대, 지방 교부금 확대

* 기업 조세부담 3,500억 위안 가량 경감 및 기업비용 부과금 2,000억 위안 경감

○ (통화정책) 전년도 보다(13.0%) 낮은 12%를 통화증가량(M2) 목표로 제시

— 이를 통해 유동성 안정 도모하면서 시장이자율을 낮춰 “삼농(농업·농민·농촌)”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하고, 인민폐 환율 시장화를 추진

- (수출입) 전년도와 같게 수출입 안정 및 호전을 목표로 제시
 -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목표로 제시
- (고용) 지난해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기초로 '17년 목표를 상향 조정
 -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4.5% 이내로 제한 제시했으나, 도시 신규고용 목표를 지난해 보다 100만명 많은 1,100만명으로 상향 조정

<2017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지 표	'17년 목표	2016년 성과	
		목표	실적
GDP증가율	6.5 내외(초과달성 가능)	6.5~7.0%	6.7
물가상승률	3% 내외	3.0	2.0
도시등기실업률	4.5%이내	4.5이내	초과 달성 4.02%
도시신규고용 (만명)	1,100	1,000	초과 달성 1,314
수출입	수출입 회복 안정 및 호전, 수지 균형	회복 안정 및 호전, 수지 균형	부진 심화, 하반기 부진 완화
재정적자	3% - 2.38조 위안(전년대비 2천억 위안 증가)	3.0	3.8
통화증가율	12 내외	13.0	11.3

자료 : <정부업무보고>, 2016년, 2017년

2. (분야별 정책) 성장, 혁신, 글로벌화

- 올해 <정부업무보고> 가운데 경제분야와 관련된 정책은 대략 5가지를 들 수 있음

<2017년 5대 분야별 정책(요약)>

- 5대분야 : 성장, 혁신, 대외경제, 생태환경, 경제개혁

분야	내용	'16년 비교
성 장	소비 촉진, 투자 확대 - 지역균형발전 및 신형도시화 추진	좌동
혁 신	과학기술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전통산업 개선, 창업 육성	창업, 혁신 등 개혁정책의 일부로 제시
대외경제	개방 확대, “반(反)글로벌화”와 보호주의 등 불확실성에 대응 - 일대일로 추진, 수출입 확대, 투자개방 확대, 양자·다자협상 확대	일대일로, 국제 생산력 협력, 수출입 확대, 대외 개방 확대, 양자·다자 협상 진전
생태환경	공기, 수질, 토양, 생태계 보호 강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대처 강화, 에너지환경산업 육성, 생태계 보호
경제개혁	○ 삼거일강일보 추진, 민생 지원 ○ 정부역할, 재정, 금융, 국유기업(자산) 개혁, 민간경제 개혁	공급측 개혁, 재정, 화폐, 금융개혁 추진

자료 : 뒤의 본문 내용을 요약

1) 성장

□ ('17년 추진계획) 성장 위한 내수잠재력 극대화가 정책기조로 이를 위해 △공급-수요 구조 적응, △소비-유효투자 상호 촉진, △혁신 통한 실물경제 성장에 주력한다는 계획

○ (소비 확대) 소비수요 변화 감안해 정책 및 소비환경 개선

- (서비스소비 촉진) △서비스업 종합개혁시범정책 통해 교육·양로·의료 서비스 확대, △서비스모델 혁신·융합 통해 의료-양로 결합, 문화창의 등 신흥소비 추진, △여행시설 및 서비스 개선 통해 농촌·휴양·전역여행(全域旅遊)* 발전, △디지털 가정(가정내 디지털 사용 확대)·유선교육 등 정보소비 여건 개선

* 일정지역내 관련 자원을 종합적으로 동원·개발·배치하는 여행업 개발 전략

- (고품질 상품소비 확대) 제품 확대·품질 제고·브랜드 육성 통해 대내외 “동일라인업·동일상표·동일품질”(同線同標同質) 실시 범위 확대하고 고품질 소비 수요 충족
- (시장질서 정돈과 규범화) 허위 품질표시, 가짜 광고, 가격 사기등 조사 강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

○ (유효투자 확대) 부족분야 공급 확대·구조조정·혁신·민생지원 위한 자금 투입 확대

- (주요 프로젝트) △철도건설 8천억 위안(전년과 동일), 도로·수운(水運) 1.8만 억 위안(전년비 1조 5천 억위안 증가), 15개 중대형 수리공정 재개공, 궤도교통·민항·전신인프라등 중대형 프로젝트 확대,
- (예산 투입) △중앙 예산투자 5,076억 위안(전년비 76억 위안 증가), △민간투자 정책조치 추진 및 개선, △정부-사회간 자본협력 심화, △관련 가격·세비 등 우대정책 개선 추진

○ (지역발전구조 개선) “3대 중심지역(3大支撑带)”*와 “4대 권역 (四大板块)”** 발전 통합 추진

* ‘3대 주축(3大支撑带)’ : ‘일대일로’, 수도권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건설

** ‘4대 권역(四大板块)’ :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

- (주요 프로젝트) △국가급 신구·개발구·산업개발구(園區) 등 혁신발전 추진, △자원고갈·생태파괴지역 전환 발전 지원, △대기 자원 배치 특화, △해양경제시범구 추진 통해 해양강국건설 및 해양권익 보호

4대 권역 전략	3대 전략(지탱대) 전략
	
<p>4대 권역 :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p>	<p>3대 전략 : 수도권(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경제벨트, ‘일대일로’</p>
<p>자료 : Baidu</p>	

○ (신형도시화) '13부터 추진해 온 신형도시화 정책 지속 추진

- (주요 프로젝트) △1,300만명 이상 농촌 → 도시호적 전환 및 거주 증제도 확대, △중소도시·특화형 소도시 발전 겨냥한 현(縣) 및 특대진(鎮(읍(畛)에 해당)) 시(市) 설치 통한 도시군 확산(輻射)·동반 역할 확대, △건축업 개혁·발전 통한 설계 및 건설 품질 제고, △도시 지상-지하 통합건설 통한 지하종합통로 2천킬로 이상 재개공, 도시 침수 지역 개선 3년 행동계획, △해면도시* 건설

* 해면도시(海綿城市, Sponge City) : 환경변화와 자연재해 등 변화에 대한 양호한 수용력을 가진 도시를 스폰지에 비유한 표현으로 강우시 흡수·저장·배수·정수 등이 가능하고 저장한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

□ (전년과 비교) 대체로 '16년의 정책을 구체화·지표화하고 있음

- 단, 세컨드카 소비 장려, 신에너지자동차 소비 지원,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 면세점 증설, 여행업 확대 등의 조치는 없어지거나 표현을 바꾸고 있어 일부 정책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성장 정책 '17년과 '16년 비교>

	2017년	2016년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정보 소비 여건 확대, △고품질 소비, △시장질서 규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정보·신흥소비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달 등 물류 개선, 세컨드카, 신에너지자동차 소비 여건 개선, 일부 소비재 관세인하, 면세점 증설, 여행 확대 등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해 투자 지속하되, 투자 예산규모 일부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투자, △도로 투자, △대형 수리공정 시작, △중앙예산 확대 등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권역*, 3대전략(지탱대)** * 동부, 중부, 서부, 동북 지역 * 수도권지역, 장강경제벨트, 일대일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수도권, 장강경제벨트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 중부, 동부, 자원형 지역 발전
신형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화 수치목표 제시 (1,300백만명 이상), 市 승격 확대, 도시건설 구체목표(지하도시, 해면도시 등)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민화·도시거주인구 확대, △도시 계획 및 건설 강화

2) 혁신

□ ('17년 추진계획) 혁신을 통한 실제경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이를 위해 '혁신구동(驅動)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실제경제의 특화구조를 촉진하고 품질·효율·경쟁력 제고에 집중

○ 과학기술 혁신

- 기초연구와 1차(원시성) 연구의 장기적인 안정적 지원메커니즘 보완하고, 국가 중요과학기술 인프라시설 및 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며 개방적 과학기술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 전면적 혁신개혁 실험,
 - 고급학교와 과학연구기관 자율권 확대, 지분제공 및 보너스 확대,
 - 과학연구 비용 및 프로젝트 관리 제도 개혁,
 - 지적재산권 종합관리개혁시범 추진,
 - 인재육성 시스템 심화

○ 신홍산업 육성

- 전략적 신홍산업 발전규획 전면 실시하여 신소재·인공지능·집적회로·생명제약·5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 및 이전 가속화하고 산업클러스터 육성
 - 동반경제 통해 사회자원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대중 생활 편의 제고
 - 혁신적·포용적 심사원칙에 따라 신홍산업 감독관리 규정 제정
 - 통계체제 개혁하여 신홍산업통계 집계 방법 개선
 -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더욱 빠르고 저렴한 정보네트웍 구축
 - 인터넷 이용료 인하, 모바일 원거리 이용비(漫遊費) 철폐
 - 중소기업 인터넷전용선 가입비 대폭 인하
 - 국제장거리 전화비 인하 등 추진하여,
- “인터넷 plus(+)”의 심화 발전 및 디지털경제 발전 촉진

○ 전통산업 개조·업그레이드 추진

- “중국제조 2025” 지속 추진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응용 가속화하고 신기술·신업태(新業態)·신모델을 통해 전통산업의 생산·관리·마케팅 모델 변혁 추진
- 스마트 제조를 중심 목표로 삼아 국가지능형 제조시범구·제조업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공업강화기지·중대 장비전문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선진제조업 발전시키고 중국제조 2.0의 중고급화 발전을 추진
- 제조강국 건설 정책시스템을 개선하여 여러 방식의 기술개조 지원을 통해 전통산업의 재활력을 촉진

○ 대중창업·만인혁신 지속 추진

- “창업혁신”은 창업을 통한 취업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신규 생산능력 교체와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역량이자 공평한 기회와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현실적 통로로서 지속 강화 필요
- 신규 “창업혁신” 시범기지 건설, 대기업·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 통한 전문화된 대중적 창업 공간 장려, 각종 주체의 원력·온라인을 통한 상호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와 대기업 사업수준 제고를 추진

○ 품질수준 제고

- 품질제고 액션플랜에 따라 전면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경쟁메커니즘 건전화
- “중국장인”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중국브랜드”를 창조하여 중국의 품질중심시대 진입을 촉진

□ (전년과 비교) 전년도 공급측 개혁의 일부로 제시된 정책을 올해는 별도로 독립시켜 4가지 과제*로 제시

* 과학기술혁신 지원, 신흥산업 육성,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창업 장려

※ 이상 내용을 종합해 2016년 정책 내용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혁신정책 '15년과 '16년 비교>

2017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대 과제중 4번째 독립 과제로 제시*, 즉 - △과학기술 혁신 지원 확대, △신흥산업 육성,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대중창업·만인혁신, △품질 혁신 방침 제시 <p>* “혁신이 인도하는 실물경제 업그레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측 개혁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 △기업 혁신능력 제고, △대중창업·만인혁신, △과학기술 관리체제 개혁 등을 제시

3) 글로벌화

□ ('17년 추진계획)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와 국내발전 수요에 대응해 대외개방전략 배치(布局)를 더욱 심화하고 개방형 경제 가속화하여 더욱 깊고 수준 높은 대외개방 추진

○ “일대일로”추진

– ‘공동비즈니스·공동건설·공동향유(共商共建共享)’ 방침에 따라 육상경제회랑과 해상협력지점 건설을 가속화하고 ‘연선(沿線) 대통관(大通關)* 협력메커니즘 구축

* 일대일로 지역을 포괄하는 일관 통관체제

– 국제 생산력 협력 심화하고 중국의 설비·기술·표준·서비스의 해외진출(走出去) 통해 비교우위의 상호보충 실현

– 교육·문화·여행 등 분야 교류협력 강화

– 고품질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추진

○ 무역의 회복 및 고도화·원활화 촉진

– 수출입정책 통해 비교우위 제품의 수출과 수입을 촉진

– 수출신용보험 활용률을 높이고 패키지설비 수출용자 제공 확대

– 서비스무역 혁신발전기금 설립

– 시장구매 무역·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발전 지원

– 무역 전환 업그레이드시범기지 건설 가속화

– 가공무역 산업체인을 중고급 분야로 연장하고 중서부지역으로 계단형 이전을 촉진

– 국제무역 “단일창구” 확대하고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내산업

의 승급 가속화 촉진

○ 투자개방 확대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수정하여 서비스업·제조업·광산업에 대한 외자기업 개방폭 확대
- 외상투자기업의 국내 상장·채권발행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참여 허용
- 자격 허가·표준 제정·정부조달·<중국제조 2025>정책 등 분야에서 내외자기업 동일시 추진(내국민대우)
- 지방정부에 외자도입 특혜정책 제정 권한 부여
- 고표준·고수준의 11개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고 경험 확산
- 대외투자의 건강·규범적 발전 유도하고 리스크 예방능력 제고

○ 다자주의 유지, 보호주의 반대, 무역·투자의 자유화·원활화 추진

-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 및 다자무역체제의 주도적 지위 옹호하고 다자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
- 중국-ASEAN FTA 업그레이드 의정서 발효 추진,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조기 타결,
- 아태지역 FTA(FTAAP) 적극 추진,
- 관련국 및 지역과 투자·무역협상 지속,
- 책임있는 국가로서 기존 약속사항 진지하게 이행하고 권익을 수호

※ 특히 올해 <보고>에서는 다자주의 보호·보호주의 반대를 강조

-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중국은 세계평화 건설자·글로벌 발전의 공헌자·국제질서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 다자체제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옹호하고, 각종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경제글로벌화가 호혜포용적이고 공정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할 것이다”(리커창 총리, <보고>)

□ 더 나아가 중국의 전문가들은 '17년 이후 중국이 더욱 근본적인 개방 확대, 더 나아가 글로벌화로 나아갈 것으로 지적

- 예를 들어 ‘17년 양회 종료후 양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츠푸린(遲福林)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향후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규범의 촉진자인솔자가 될 것으로 밝히면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

<중국 “1차개방”에서 “2차개방”으로 : 개방 비교>

	“1차개방”	“2차개방”
기 점	저소득 수준 공업화 초기(국내) 제조업 글로벌화(국제)	상위 중등 소득 수준 공업화 중후기(국내) 서비스업 글로벌화(국제)
외부환경	글로벌화 제도장치 비교적 안정적	글로벌화 제도장치 불안정, 변수 발생
내 부	노동력의 무한공급, 자본 부족	노동력 공급 감소, 자본 잉여
개방 중점	화물무역 제조업 시장 개방	서비스무역 서비스업 시장 개방
개방 방안	기존 국제시장에 편입(융합)	“일대일로”통해 신시장 능동적 개척
자본 흐름	“투자유치(引進來)” 위주, 순유입	“투자유치(引進來)”와 “해외진출(走出去)” 병행, 순유출
개방 경로	WTO 가입	자유무역전략 전면 실시
개방 체제	외향형 경제체제 구축 : 수출주도전략 포함하여 수출형 공업 발전 장려·지원 체제 형성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 자유무역이 이끄는 대외개방체제 구축
국제 역할	국제규범의 수용자, 참여자, 추종자	국제규범의 추진자, 촉진자, 인도자

* 자료 : 迟福林, <中国经济转形趋势与增长前景>(2017.4.4)

□ (전년과 비교) 개방확대에서 더 나아가 개방적 국제경제질서 구축으로
진전

-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선도 역할 자임하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자유 무역지대(FTA) 네트워크 구축 방침 제시
- 일부 전문가, “2차 개방”의 원년으로 제시

<대외경제정책 '16년과 '17년 비교>

2017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외 개방 확대 - △일대일로 추진, △무역 안정 및 호전 촉진, △외상투자 환경 개선, △국제무역 자유화·원활화 추진 (FTA 포함) ※ 다자주의 보호, 각종 보호주의 반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고수준 대외개방 통한 협력과 공동번영 실현 - △일대일로 추진, △국제 생산능력 협력 확대, △수출 확대 및 고도화 추진, △외상투자 유치 및 자유무역 시범구 추진, △FTA전략 가속화(한중일 FTA, 중미·중EU BIT, RCEP, FTAAP 등)

4) 생태환경

□ ('17년 추진계획) 공기, 수질, 토양, 생태보호 지속 추진

○ 푸른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

- 올해 중 이산화유황·질소화합물 배출량 3% 감축, 중점지역 미세먼지 (PM2.5) 농도 대폭 감축 목표 추진
 - (석탄연료 오염 대응) 북부지역 동계 청결연료 난방, 석탄연료의 전기 대체, 석탄의 가스 대체 300만호 이상 추진, 지급시(地給市) 이상 도시지역 석탄연료 화덕 철거, 석탄발전소 배출감소·에너지절약 개조사업 동중부지역 내년까지 완료 및 서부지역 2020년 완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오염원 관리) 중점 업종 오염원 관리 전담프로젝트 전개, 중점공업 오염원 24시간 온라인 감독 실시, 배출감소 미달기업 목표시한 지정후 미달성시 법에 따라 정지조치 실시
 - (자동차 배기가스관리) 오염유발 자동차 도태, 노후차량 및 과다배출차량 도태 및 전문관리 강화, 청결에너지 자동차 장려, 중점 지역에서 청정경유 사용 확대
 - (중금속오염 공기대응) 스모그형성 연구 강화, 중점지역 연합 대응범위 확대하여 비상조치 강화
 - 환경관련 법집행 엄격화 및 관리책임 강화

○ 수질·토양오염 예방

- 올해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암모니아질소 배출량 2% 감축, 중점지역 수질 및 농업지역 오염원 예방 강화
- 토양오염 조사하여 적정 관리조치 제정, 도농종합환경관리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실시,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육성

○ (생태보호건설) 생태보호 레드라인 확정, 삼림관리 강화, 장강경제벨

트 중점생태회복, 제2차 산수림호(山水林湖) 생태보호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여 퇴경환림환초(退耕換林換草)* 1,200만 무(畝(마지기)) 이상 완료
 * 경작지를 숲과 초목지역으로 원상 복구하는 사업

□ (전년과 비교) 지난해에 비해 환경개선 지표 달성 및 환경오염 대응능력 강화를 강조

<생태환경정책 '17년과 '16년 비교>

2017년	2016년
○ 생태환경, 특히 공기오염 개선 집중 노력 - △푸른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수질·토양 오염 예방 강화, △생태 보호 및 건설	○ 환경관리 확대하여 녹색발전 진전 달성 -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 관리, △에너지절약·환경산업 육성, △생태안전 강화

5) 경제개혁

□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 기존 성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으로 효과 극대화

* 3가지를 없애고(去), 한가지를 낮추며(降), 한가지를 보조(補)한다는 방침. 삼거(과잉설비 해소, 부동산재고 해소, 부채레버리지 감소) ; 일강(비용 절감); 일보(민생 지원)

○ 생산설비 감축(去)

- 금년 중 철강생산 5천만톤 전후 감축, 석탄 1.5만톤 이상 퇴출
- 석탄발전소 도태·건설중지를 통해 석탄발전 과잉리스크 예방하고 석탄발전 업종 효율 제고하며 청결에너지 발전공간 확보
- 환경보호·에너지소비·품질안전등 관련 법률 규정과 표준 엄격히 집행
- “좀비기업”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기업 M&A·과산청산을 통해 기준 불충족 생산설비 도태하고 과잉생산 업종의 신규 생산설비 확대 엄격하게 통제
- 생산설비 감축에 따른 직원 재배치 추진하여 중앙재정전용 보조금 적시 교부하고 지방과 기업의 관련 자금 및 조치 실시 지원하고 직원 재고용 방안과 생활보장 방안 마련

○ 부동산 재고 감축(去)

- 3~4선 도시 부동산과잉 심각한 상태로 주민 거주 및 도시이주 인력의 주택구매 수요 지원.
- 지방은 거주수단이라는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책임하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강한 장기적 발전기제 건립 가속화하고, 시장 위주의 다양한 수요 만족시키고 정부위주의 기본 보장 제공
-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류 통제 강화하고 주택비용 상승 압력이 큰 도시의 주택용지 확대, 규범적 개발·판매·중개행위 규범화
- 도시지역 수천만명 주민의 판자촌지역 개조 추진, 금년중 판자집

지역 주방개조 600만 건 완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민 거주여건 개선

○ 부채 레버리지(지렛대) 제거(去杠杆)

- 총 간섭을 억제 전제하에 기업 간섭을 축소
- 기업의 실제자산 확대, 자산증권화 추진, 시장화법치화 채권 주식 전환을 지원하며 주식융자폭 확대하고 기업 특히 국유기업 재무간섭 제약을 강화하여 기업부채 감소를 점진적으로 추진

○ 비용 절감(降) : 조세 및 비조세성 기업부담 경감

- 조세성 부담 경감 추진 :
 - 납세의무 소득기준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감가상각 비율 50% → 75% 상향조정 등 구조적 감세 방안 발굴
- 비조세 부담 경감 추진 :
 - 1)정부성 기금 전면적 정리, 도시공용사업부가등 기금 철폐, 지방정부 독자적 기금감면권 부여,
 - 2)중앙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사업성 비용부과 35개항 철폐 혹은 중지하여 비용징수 항목을 절반 이상 축소하고 보류된 항목의 징수비용도 삭감
 - 3)정부가 정한 기업경영성 비용징수 감축, 행정심사 중개서비스 과징금 취소 및 삭감하여 금융·철도·화물등 분야 기업경영성 비용 징수를 인하하고 시장조절류 경영서비스성 비용징수 감독관리 강화
 - 4)“5대 보험과 1개 기금(五險一金)”*관련 장려비 비율 적정수준 감축
 - *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생명보험, 주방공적금
 - 5)기업의 제도적 교역비용 낮추고 에너지·물류등 비용 감축

○ 부족분야 보충(補)

* 민생 개선을 중점 목표로 공공서비스·인프라·혁신발전·자원환경 지원

- 중심은 빈곤지역과 빈곤인구 감소

- 올해중 농촌 빈곤인구 1천만명 이상 감소, 차상위 빈곤층 전환 340만명
- 중앙 전용재정의 빈곤지원 규모 30% 이상 확대
- 특별 빈곤지역·혁명근거지 개발 강화하고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개선, 특색산업 발전·노무수출·의료 및 교육 지원

□ (기타 개혁과제) 기초성·핵심성 개혁 가속 추진하여 내생적 발전 동력 증진

○ 정부기능 전환

- 정부간소화 및 분권화, 정부간여 축소, 서비스 개선(簡政放权·放管結合·优化服务) 추진
-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국무원 부처별 권력과 책임 리스트를 제정하고,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시범조치를 확대하며, 정부의 자유 재량권을 축소하고 시장의 독자적 선택권 확대
- 생산 및 서비스 허가증 일부 정리하여 취소
- 다양한 증명서 통합과 “하나의 증명서 다양한 활용”(证照分离) 개혁을 포함하는 상사제도 개혁 추진하고, 사전사후 감독관리제도 개선
- 국무원 부처 및 지방정부간 정보시스템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무서비스플랫폼 구축

○ 재정·세수 개혁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营改增) 시범 추진, 부가가치세 세율 간

소화하여 올해중으로 4단계 세율을 3단계로 줄여 과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 조세부담 경감

- 중앙-지방간 업무 및 재정권한 책임구분 개혁 추진하고 수입 구분 총체방안 제정 가속화, 지방세체제 건전화, 지방정부 채권조치 규범화 실시

○ 금융체제 개혁

- 중대형 상업은행에 금융사업부 설치를 장려하고 국유 대형은행은 솔선하여 차별화된 고과평가방법과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융자난 완화
- 농촌신용합작사의 “삼농” 지원 강화
- 다층차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심화하여 주판시장의 기초적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성 주식시장 발전
- 보험자금 지원을 위한 실제 통로를 확대
- 녹색금융 발전
- 불량 자산·채권 위약·그림자 은행·인터넷 금융 등 위험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주의
- 금융감독관리체제 개혁 지속 추진하고 리스크 ‘방화벽’ 구축

○ 국유기업·국유자산 개혁

- 핵심경쟁력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목표로 삼아 효과적인 법인 관리구조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시장화 경영메커니즘 달성
 - 올해 중 공사제 개혁 기본적 완성
 -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하여 전력·석유·천연가스·철도·민항·전신·군수공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 확보
 - 전력과 석유천연가스 체제 개혁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적 업무 진행
 - 국유기업 체질개선과 효율제고 지속 추진
 - 국유자산 투자·경영공사 개혁시범 추진

· 국유자산 감독관리 개선·강화하여 자산의 보존 및 증식 달성

○ 비공유제 경제활력 촉진

- 비공유제 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장려 및 비공유제 경제의 시장진입 확대
- 외자기업 투자가 개방된 업종과 영역에 대해 민간자본 진입 허용
- 불공정 경쟁 금지

□ (전년과 비교) 기존의 공급측 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개념화하여 명료하게 제시

<공급측 개혁 및 기타 경제개혁 비교>

구분	2017년	2016년
공급측 개혁	“삼거일강일보”로 요약, 제시 삼거(과잉설비 해소, 부동산재고 해소, 부채레버리지 감소) ; 일강(비용 절감); 일보(민생 지원)	○ ‘공급측 개혁으로 지속적 성장 동력 증강’ - △정부기능 전환, △전사회적 창업 혁신 장려, △과잉생산 완화·비용 절감·효율 제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 개선, △국유기업 개혁 추진, △비공유제 경제 활력 제고
기타 경제개혁	정부기능 전환, 재정세수체제 개혁, 금융체제 개혁, 국유기업·국유자산 관리 개혁, 비공유제 경제활력 제고, 재산권 보호제도 건설, 사회체제 개혁 추진	- 이외에 거시경제정책 부분에서 재정세수체제 개혁, 금융체제 개혁 제시

<'17년 <보고>의 분야별 정책 요약>

과 제	내 용
공급측 개혁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 삼거(과잉생산, 재고, 간섭 없애기), 일강(비용 감축), 일보(부족 보충)
주요 문제·핵심고 리 개혁	정부기능 전환, 재정체제 개혁, 금융체제 개혁,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 비공유제경제 활력 제고, 재산권 보호제도 건설, 사회체제 개혁, 생태환경 개선
국내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수요 적응·소비제고-유효투자 상호 촉진·지역별 도-농 협조발전 통한 내수의 지속적 성장 촉진 확대 ○ 안정적 소비 확대 촉진 : 서비스소비 가속화, 고품질 소비 확대, 시장 질서 정돈 및 규범화 ○ 유효투자 적극 확대 : 철도, 도로, 수로, 수리공정, 궤도교통, 민간항공, 전신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민간투자 확대 위해 PPP 투자 확대 ○ 지역발전구조 특화 : 삼대전략 및 “사대판괘” 통합 추진, 국가급 신규·개발구·산업원구 등 혁신발전, 공간자원 배치 특화, 해양경제시범구 건설 추진 ○ 신형도시화 : 1,300만명 이상 도시민화, 중소도시 및 특색 소도시 발전, 현 및 진 시 승격, 건축업 개혁, 지하도시 건설, 도시면모 개선
혁신 인도형 경제 전환 승급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신흥산업 육성, 전통산업 개조 승급, 대중창업·만인혁신 지속 추진, 질적 제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수입 확대, 농업구조 조정, 현대식 농업 건설·농촌개혁·농촌인프라 강화
능동적 대외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추진 : 육상회랑·해상협력지 건설, 국제 생산협력 심화, 교육·문화·여행 등교류협력 확대 ○ 대외무역 촉진 : 수출신용보험 확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인도기금 설립, 시장구매무역·대외무역 종합서비스사업 발전 지원, 대외무역 전환승급 시범기지 건설 가속화, 가공무역 산업체인 고도화 및 중서부지역 이전 촉진.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외자기업 상장·채권발행 허가,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 허가, <중국제조 2025>정책 혜택 제공시 내국민대우. 11개 자유무역시험구 진행 ○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 추진 :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 다자무역협상 적극 참여. 중국-ASEAN FTA 수정보완, RCEP 조기 달성, FTAAP 추진. 관련국가와 BIT 체결 추진.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
생태환경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색하늘 보호전쟁 강력 추진 : 석탄오염 해결, 오염원 관리, 자동차배기가스 관리 강화 ○ 수자원 및 토양 오염예방 강화 ○ 생태보호 및 건설 추진
민생 보장 및 개선	취업 및 창업 확대,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 건강중국 건설, 민생보장망 추진, 문화 사업 및 문화 산업 발전, 사회관리 혁신 추진, 인명 보호, 안전관리 강화
정부건설 강화	법치 강화, 청렴 강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추진

* 자료 : 본문 요약

Ⅲ. 정책으로 보는 '17년 진출 유망분야

1. 성장정책 추진에 따른 기회

- (소비) 소비 확대정책에 따른 서비스 확대, 인터넷 보급 확대, 고품질 소비재 수요 확대는 관련 업종에 기회
 - (서비스) 교육, 양로, 의료,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시장 지속 확대
 - (인터넷 보급) 디지털 가정, 유선교육 등 정보소비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
 - (고품질 소비재) 화장품, 의약품, 위생용품, 유아용품, 의류패션 등 고품질 소비 수요 확대

- (투자) 투자 확대에 따라 인프라 관련 수요, 첨단 설비 및 기계류 수요 확대 예상
 - 철도, 도로, 수운 등 인프라 투자 및 중대형 프로젝트, 민간항공·전신 등 분야 인프라 수요 확대
 - 설비·기계 등 신규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요도 확대 예상

- (지역개발) '4대 권역', '3대 전략지역(지탱대)' 등 지역발전 계획 본격 추진에 따른 수요 확대 예상
 - 건설, 건축 및 전자재등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북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예고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북한-한국간 협력사업도 고려할 수 있음

- (신형도시화) 농민의 도시민화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사업 기회도 늘어날 예정
 - 도시화 관련 건설, 건축 및 관련 전자재, 소프트웨어는 물론 도시화에 수반되는 서비스 수요(물류, 유통,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가사서비스 등) 확대 예상

2. 혁신정책 공간

- (인터넷 plus(+)) '인터넷 plus(+)' 확대에 따른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응용 비즈니스(전자상거래, 첨단 물류시스템, 인터넷 의료, 인터넷 교육 등) 기회 확대 예상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특히 스마트 팩토리 추진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관련 첨단 설비 및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 (창업) 대중창업 · 만인혁신에 따른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기회 확대
 - 창업붐 확산과 중국내 창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중국내 직접 창업기회 확대
 - * 예를 들어 외국인이 투자한 시장경영주체는 2015년 2월과 4월 각각 2천개 및 3천개로 같은 기간 중국내 전체 신규 시장경영주체 수의 0.26%와 0.22%에 이르고 있음

3. 대외개방 기회

- 중국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회가 더욱 커질 전망
 - 그간 대외경제정책 관련 리스크로 빈번하게 거론돼 온 가공무역 규제나 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은 없음
 - (개방 확대)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역 촉진 및 원활화, 투자 자유화, FTA 적극 추진등이 표명되었으나 올해 들어 자유무역 · 다자주의 수호 등 중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 구축 의사까지 내보이고 있음
 - (관련 업종) 대부분 분야의 서비스 및 투자 여건 개선 및 소비재 진출기회 확대 예상
 -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 개방 확대 및 서비스 개방 추가*로 중국진출 여건 개선 예상
 - *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서도 투자·서비스 자유화 확대 예정이며, 중

- 국 자체도 외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방을 확대할 예정
- 중국의 소비재 수입 여건 개선 정책이 계속될 예정

4. 생태·환경 정책의 기회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정책은 리스크가 아닌 기회
 -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 유발 업종의 중국 진출은 이미 많지 않으며, 중국내 환경·에너지절약 목표제 실시 및 관련업종 육성에 따른 시장기회가 더 클 전망
 - (관련 업종)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제품과 서비스업
 -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에너지 절감 관련 소재, 제품(단열재 등), 신에너지 소재·부품(태양열, 배터리, 풍력 등)
 - (환경) 환경 관련 소재 및 부품(수처리, 대기오염 정화) 및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 ※ 다만,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주의 조치에서 보듯이 이 분야가 신생 업종으로 비관세장벽이 실시될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

<13.5 기획 정책분야별 기회와 리스크>

분야	정책내용	기회	관련 업종
성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소비 확대 - 소비 확대, 고급화 	서비스 및 고급 소비재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양로, 의료, 문화 오락, 체육, 여행, 문화컨텐츠 - 화장품, 의약품, 식품, 고급가전, 위생용품, 유아용품, 의류패션, 환경제품(정수기·공기청정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도시화 - 지역발전전략 · ‘3대 전략(지탱대)’, ‘4대권역’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업종 투자 수요 확대 - 소비 확대,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 첨단 인프라(교통관제 시스템, 정보인프라, 전력, 전신, 재해 예방 및 관제 등) - 서비스(유통, 건축, 환경, 교육, 의료, 양로...)
혁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plus(+)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 - 혁신정책에 따른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인터넷 응용서비스(전자상거래, 첨단물류, 인터넷 의료·교육 등) - 첨단 설비·기계 - 창업투자(통신, 소프트웨어, 유통, 프랜차이즈 ...)
대외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추진 - 투자서비스 자유화 - 무역 촉진, 고도화원활화 - FTA 네트워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환경 개선 - 서비스개방 확대 - 수출여건 개선 - 제3국 동반진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 서비스·투자 진출 - 3국 공동프로젝트
에너지절약 ·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하늘 보위전’ - 토양수질관리 강화 - 생태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 환경산업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 환경설비, 소프트웨어 - 환경·에너지 서비스

* 자료 : 본문 요약

IV. 시사점과 대응방안

□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진출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

- 글로벌 성장 둔화속에서도 중국은 유일한 고성장 거대시장으로서 최대 수출대상 국가임
 - 우리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16년 25.1%이며 '17년 1~2월 26.2%에 이르고 있으며, 홍콩 포함시 각각 31.7%와 32.9%에 이룸
- 성장 속도와 중국정부의 강력한 성장 지속 및 업그레이드 전략으로 보아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보아 유망 진출분야는 서비스, 고품질 소비재, 인터넷(정보통신) 관련분야, 첨단 장비·기계, 환경 및 신에너지 관련분야로 전망

- (서비스) 중국의 소비수준(발전단계) 제고, 정부의 육성 의지로 보아 서비스시장 급속 확대 예상
 - 교육, 의료, 양로, 문화오락, 체육, 여행은 물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디자인, 유통, 물류, 컨설팅, 법률등 첨단 서비스시장 급팽창 예상
 - 더구나 중국정부가 서비스시장 개방을 예고*하고 있고 한중간 서비스 추가개방도 예정돼 있어** 서비스시장 진출여건도 개선될 전망

* <외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 및 서비스 개방 추가 예상

* 한중 FTA 발효('15.12월) 2년내 투자·서비스 후속협상 개시 및 개시후 2년내 타결이 규정돼 있어 한중간 서비스개방 확대도 이루어질 전망

- => (진출방안) 서비스 분야는 중국의 개방 확대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동시에 중국안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소비(판매)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해 돌발적 상황 관리와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
- (고품질 소비재) 중국내 소비수준 제고 및 중국정부의 시장 육성 방침, 시장질서 정돈 정책에 따라 중국내 고품질 소비재 수요 확대되고 시장질서(지재권, 유통질서 등)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 (진출방안) 고품질 소비재의 경우 품질은 물론 브랜드(업체 및 '국가브랜드') 관리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인증, 통관 등 비관세 장벽 대응능력 강화
- (인터넷(정보통신)) 중국이 이미 최대의 인터넷 기반 상거래국가로 떠올랐고, 중국정부의 인터넷 기반경제 구축정책 본격 추진에 따라 가속화 예상
- (첨단 장비·기계) '중국제조 2025' 등 신흥산업과 전통산업 업그레이드에 따라 관련 수요 증가와 동시에 중국의 동 분야 대외개방 확대로 중국시장 진입장벽 완화 예정
- (환경·신에너지) 관련 기준 강화 및 대외개방 확대로 신규 투자 및 기존설비 대체수요 증가 예상
- => (진출방안) 정보통신, 장비·기계, 환경·신에너지 분야는 기업간 거래(B2B) 및 기업-정부간 거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KOTRA 등 지원기관의 기업간 거래 지원(Global partnering)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정부간,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간 협력사업, 한중 FTA에 마련된 경제협력 사업을 활용

- 한중 교역이 서비스, 소비재, 프로젝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중간 '네트웍' 및 협력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노력

- 비관세장벽을 통한 중국의 시장활동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는 철저한 사실 확인 및 효과적인 민관 공동대응체제 마련

- 돌발적 사항이 한중교역에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적 네트웍 강화와 브랜드 관리, 사회적 기여 활동(CSR) 강화가 더욱 중요

- 무엇보다도 이제 한중교역이 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무역·투자 뿐만아니라 외교·안보적 예측 가능성 강화와 일상적 유대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전인대(3/5~15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